

백성리 지역이 모든것의 근본이다
民爲邦本

지역 공동체와 돌봄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 주민과 시민 '사이'를 연결하는 '가벼운 공동체' 전략

2023. 4. 25. (제100호)

공석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민위방본(民爲邦本)>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뜻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를 통해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역 공동체와 돌봄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 주민과 시민 '사이'를 연결하는 '가벼운 공동체' 전략

2023. 4. 25.(제100호)

공석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CONTENTS

- I. 문제제기
 - II. 디지털 플랫폼으로 수렴되는 복합위기
 - III. 지역회생 정책에 대한 성찰: '아래로부터의 거버넌스' 전략
 - IV. 돌봄, 지역공동체 민주주의 구현: '가벼운 공동체(light community)'의 새로운 실험장
 - V. 함의 및 제언: 개인에서 시민으로 유턴(U-turn)
-

〈요 약〉

지역 공동체와 돌봄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 주민과 시민 ‘사이’를 연결하는 ‘가벼운 공동체’ 전략

- 저출산, 초고령화, 수도권으로 인구집중, 지방소멸, 청년 일자리, 이주민과 다문화,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부상 그리고 MZ세대의 새로운 삶의 방식 등이 동시적으로 한국사회를 압박 혹은 위협하고 있음. 특별히 돌봄은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죽는 것보다 죽어 가는 과정이 더욱 힘들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절감하고 있으며 대안을 갈구하고 있음. 돌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의 민주주의 과제인 것임.
- “우리는 쉽게 연결되지만, 능력이 없는(easily connected but incompetent)” 디지털 플랫폼의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사회의 붕괴와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가 선택한 ‘추격전략’(catch-up)에 기초한 지역/지방/풀뿌리 지원정책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중앙 혹은 지방정부의 획일적 보조금 정책은 지역 주민 간의 상생발전에 대한 합의와 협력보다는 이권갈등과 개발 트라우마를 야기함.
- 아래로부터의 거버넌스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의 끈기를 제고하는 것 즉 지역 시민사회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과 연결됨. 풀뿌리 마을에서 주민은 상대적으로 쉽게 상호 공유, 공감, 공존의 노력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공간적으로나 확장될 때 다양성 인정, 상생과 협력의 과제를 마주하게 됨. 주민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타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고는 상생과 협력의 자세가 필요함. 추상적 지식이 아닌 구체적인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축적됨.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듣고, 설득하고, 합의하는 소통의 정치를 경험해야 함. 지역 사회 내에 존재하는 장애물-연줄, 텃세, 세대, 젠더 등-을 넘어서야 하며, 이것이 바로 주민과 시민 사이의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임.
- 돌봄은 사실 물리적인 접촉과 구체적인 관계성을 통한 신뢰가 없으면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가족 간의 유대관계 혹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아직도 작동하는 경우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돌봄의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것은 지속되기 어려울 정도로 개인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
- 가벼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은 일정 장소 즉, 지역(도시 혹은 마을)에서 협동과 호혜의 자원을 재발견하기(Exploring), 주민 간의 협동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강화하기(Collaborating), 주민이 스스로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하고 실천하기(Acting) 그리고 기존 관습적 활동과 경계를 창의적 넘어서기(Transgressing),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혁신적 변화를 추동하기(Transforming)를 지역 구성원이 공동으로 경험하는 것을 강조함.
- 한국 사회에는 삼농정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며 삼농에 대한 무시가 결국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의 위기로 귀결되고 있는 것임. 이런 왜곡된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새로운 기회가 바로 지역 공동체의 돌봄 민주주의 구현이며, 돌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장소는 바로 지역임.

지역 공동체와 돌봄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 주민과 시민 ‘사이’를 연결하는 ‘가벼운 공동체’ 전략

I. 문제제기

- 거시에서 미시 혹은 미시에서 거시에 이르기까지 중층적으로 연결된 복합위기에 대한 대안 찾기에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3자 모두 무던히 애를 써왔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위로부터의 기획과 정책은 성과위주로 본질적인 변화를 추동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임. 기업 역시 사회적 공헌과 책임,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최근에는 ESG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가치 영역에 관심을 돌리고 있지만, 이것 역시 본질적 전환보다는 ‘무늬’ 변화에 그치고 있음. 시민사회 역시 전통적인 지역주의, 연고주의, 개발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시민성’을 갖춘 시민을 키워내지 못한 채, 그저 가족 혹은 개인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이익 혹은 이권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과거 강한 국가에 대한 강한 시민사회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한 시민사회 운동이 당위적 차원의 정치사회 개혁을 주창하던 방식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디지털 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계기로 시민사회는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수렴되는 이른바 소비사회로 전략하고 있음. 그 결과 지역 주민은 시민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개인으로 후퇴하는 소위 ‘개인의 시대’가 도래함.
- 저출산, 초고령화, 수도권으로 인구집중, 지방소멸, 청년 일자리, 이주민과 다문화,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부상 그리고 MZ세대의 새로운 삶의 방식 등이 동시적으로 한국사회를 압박 혹은 위협하고 있음. 특별히 돌봄은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죽는 것보다 죽어가는 과정이 더욱 힘들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절감하고 있으며 대안을 갈구하고 있음. 돌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의 민주주의 과제인 것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보여주던 것처럼 정부의 위로부터의 기획 혹은 기업의 민영화 전략에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의 지역 공동체에 대한 전망과 연결시켜 근본적인 성찰과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인식해야 함.
- 저자는 그 동안 시민사회의 측면에서 거시와 미시의 복합위기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대안 찾기 연구를 진행해 왔음. 이런 견지에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도전과제로서 돌봄의 문제를 새로운 지역공동체 구성 전략과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시론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함. 그 하나의 대안으로 주민과 시민 ‘사이’를 보다 가까이 연결할 수 있는 실험적 모델로서 ‘가벼운 공동체(light community)’ 전략을 결론을 대신하여 제안하고자 함.

II. 디지털 플랫폼으로 수렴되는 복합위기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지구적 확산을 통해 초국적 차원에서 풀뿌리 지역으로까지 모든 사회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음.

-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장소로서의 지역 기능이 상실됨. 주민은 지역 공동체에 대한 확고한 소속감과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음. 풀뿌리 주민이 지역 경계를 넘어선 시민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권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주변화된 개인, 즉 개인의 시대가 도래함.
- 이 같은 거시와 미시의 중첩적 위기는 개인에게 능력주의와 경쟁주의로 더욱 무장시키고 있음. 주민은 이를 내면화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기 보다는 국가에 해결책을 요구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 사실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깊숙이 편입한 한국사회는 급변하는 초국적 사회경제적 맥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응전하는 데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산업화, 도시화, 기계·자동화, 금융 세계화 그리고 디지털 세계화를 통해 초국적 연결사회를 경험하면서 연결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 동시에 디지털 혁명이 동시에 초국적 통제와 감시망에서 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 우리는 쉽게 연결되어 있기에 마치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됨. 이제는 구글, 아마존,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의 디지털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축적하여 개인을 소비 대중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을 관찰 및 분석하여 소비 욕구를 유인 및 통제할 정도로 개인을 강제적 소비에 노출시키고 있음. 이른바 “우리는 쉽게 연결되지만, 능력이 없는(easily connected but incompetent)” 디지털 플랫폼의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하고 있음.
-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아래로부터의 도전과 전환을 피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 과연 주민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스스로 발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임. 주민 아닌 시민성을 갖춘 시민에서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함.
- 점증하는 기후위기와 사회 및 환경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미시적 차원에서 찾아야 함. 바로 우리가 삶을 함께 하는 지역의 사람들임.
- 한국사회는 물론 전지구적으로 개인주의, 성장주의, 승자독식주의, 소비주의,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의 수렴 등등 너무나도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사회로 달려가고 있음. 특별히 돌봄이 한국 사회에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돌봄 민주주의라는 말이 더 이상 지엽적이지 않으며 돌봄은 곧 민주주의이며, 우리 삶의 터전인 생태계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무열 2022). 주로 여성 혹은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짐을 맡겨 왔던 사회는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 돌봄을 국가가 스스로도 전담할 수 없음. 충분한 세수 없이 국가에게 돌봄의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임. 물론 의료시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은 국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돌봄 서비스는 결국 지역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함.
- 지역에서 창조적 인구감소(creative depopulation)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정책대안과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음.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탈 성장을 준비하며 인구가 적정한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의 관건은 바로 돌봄과 연결됨.
- 지역에서의 돌봄과 관련하여 진정 시민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함. 돌봄을 지역 내에서 구현하는 것은 결국 시민성을 갖춘 시민의 참여에 달려 있음 (트론토 2013). 이른바 돌봄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 스스로 돌봄에 대해 성찰하고, 함께 대안을 궁리하고 숙의하고, 합의한 정책 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돌봄 정책 거버넌스를 실험하는 장이 필요함.

- 이러한 실험과 실천이 생략된 돌봄 거버넌스는 위로부터 기획이고 성과 및 업적주의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거에서 활용하기 위한 전리품에 머물 가능성이 높음.
- 지역 시민사회는 돌봄과 관련하여 이러한 복합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협치를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돌봄을 협치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함. 타인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인내의 자세로 듣는 소위 경청 훈련이 필요함. 돌봄 민주주의는 바로 경청 과정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이 소통의 정치(talking politics)로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상호 신뢰하는 관계성을 이루는데 기여함.
- 만약 지역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됨. 만약 지역 내 돌봄 프로그램 참여가 개인 희생으로 각인된다면, 개인은 협력과 연대의 장소로 나오지 않게 됨. 그 결과 디지털 플랫폼으로 수렴되는 돌봄 서비스 사업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지역 주민은 시민이 아니라 개인으로 회귀하게 만들 것임. 요컨대, 돌봄은 협동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것은 소통과 협력의 참여 민주주의에 기초해야함. 공동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지역 돌봄은 말로만 하는 헛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고, 지역 주민을 시민이 아닌 개인으로 고립시킬 것임.

Ⅲ. 지역회생 정책에 대한 성찰: ‘아래로부터의 거버넌스’ 전략

- 왜 지역 시민사회는 아래로부터의 거버넌스에 주목해야 하는가는 지난 10여년의 지역회생을 위한 중앙 혹은 지방정부 주도 프로젝트의 현실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음. 농어촌 지역의 붕괴와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가 선택한 ‘추격전략’(catch-up)에 기초한 지역/지방/풀뿌리 지원정책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중앙 혹은 지방정부의 획일적 보조금 정책은 지역 주민 간의 상생발전에 대한 합의와 협력보다는 이권갈등과 개발 트라우마를 야기함.
- 복합위기의 대안으로 추진한 국가주도의 많은 정책은 지역사회 내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함. 그 원인은 성숙하지 못한 시민사회, 즉 다양한 영역과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지역 시민사회 단체,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참여에 기반을 둔 풀뿌리 민주주의 경험 부재를 들 수 있음.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의 귀환, 즉 국가주도 정책을 강화시켜 일부 특정 주민 혹은 단체 들만이 과잉대표 되어 정책이 결정될 위험이 증가함. 그 결과 지역 내 기존 갈등의 폭과 깊이를 더욱 악화시킴.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의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배제된 국가정책은 궁극적으로 시민을 분열, 분절 그리고 분리시켜 끊임없는 대립과 반목이 상존하는 ‘갈등사회’로 전략시킴. 여기에 디지털 혁명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소통의 정치가 닫히고 자기가 듣고 싶은 정보에만 노출되는 정보 지배체제(information regime)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한병철 2022).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나누면서 그들을 설득하기 보다는 자기주장을 일방적으로 쏟아 내거나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만 소통하는 자기 확증과 편 가르기가 확대 강화되고 있어 시민사회 내 소통은 물론 만남이 요원해짐.
-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거버넌스에 능동적 주체자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회의적임. 그 동안 시민사회 혹은 단체들이 참여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한 성찰이 절실함. 성급한 제도화의 길에 들어선 나머지 다수의 NGO가 형식적인 거버넌스 활동에 매몰되고,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위탁수행자로 전락했다는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함. 시민사회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보다는 정책 수행을 위해 포섭되는 소위 ‘10급’ 공무원으로 전략

했다는 자조적 평가를 주목해야 함.

-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시민사회 단체의 조직구조와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그 근본적인 문제를 NGO의 정체성과 진정성 있는 거버넌스 구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지방정부는 사실 경쟁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지역 NGO를 수동적 협력 파트너로 동원한 것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 지방정부는 진정 NGO를 수평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함.
- NGO 역시 투명성과 도덕성에 기초한 시민사회단체로서 스스로 전문성을 갖추면서 정부 정책에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참여하는 소위 ‘와일드카드’(wildcard)로서의 정체성을 견지하였는가를 성찰해야 함(임현진·공석기 2011). 현실은 많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실용적으로는 조직 운영을 위해 그리고 대의적으로는 거버넌스라는 정책구현 메커니즘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위탁 사업수행에 집중하였고, 그 결과는 시민성을 갖춘 회원은 사라지고 조직만 남는 상황을 마주함.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거버넌스 전략은 시민사회단체의 본연의 역할 즉, 풀뿌리, 지역 그리고 지역 민주주의 구현 즉 정책 입안,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구현을 위해 기여했는가를 점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 과연 지역 시민사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고하기 위한 5가지 역할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성찰해야 함. 이것은 솔테(J. Scholte) 강조한 것처럼 시민사회단체는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공공선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토론/숙의, 참여, 활동의 투명성 그리고 책무성”을 견지하여 풀뿌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시민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였는가를 스스로 평가해야 함 (Scholte 2003). 이러한 평가 없이 위로부터 기획된 중간지원조직에 형식적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는 시민사회를 더욱 위축시키는 한계를 노정시키게 됨.
- 만약 형식적인 협치가 지속된다면 NGO 활동가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더 이상 열정, 헌신을 유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역량이 소진되어 단체를 떠나게 됨. 이러한 악순환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실례로 다수의 지역 NGO는 비상근 대표와 신입 활동가 1명이 조직을 지키고 있는 상황임.
- 시민사회는 거버넌스에 참여할 때는 시민사회단체의 고유한 역할 즉, 감시자와 경쟁적 도전자 역할을 견지해하는 대원칙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됨. 중앙 혹은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사실은 벤치마킹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주목하고 NGO는 대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쟁적 도전자의 지위를 견지해야 함. 예컨대, 지역 고유한 특색과 무관한 조형물이나 기념건물이 흉물스럽게 건축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될 때, 지역 시민사회가 그것을 지나칠 때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되는 것임. 지방 정부가 성장 혹은 성과주의에 빠져 표를 의식해 트렌드를 붙쫓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역은 세금 낭비와 불품없는 결과물 즉 ‘키치(Kitsch) 전시장’으로 전락할 것임 (공석기·임현진 2020). 물론 오랫동안 아래로부터의 참여원칙과 숙의과정을 통해 이뤄낸 지역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지역 시민사회가 경쟁적 도전자 NGO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통의 정치를 올바르게 구현해야 함. 진영과 코드를 내세우며 자신의 경계를 넘어선 단체와 소통을 거부한다면 시민사회 내 분리, 분절, 분열의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임. 이것이 바로 아래로부터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새로운 전략임.
- 아래로부터의 거버넌스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의 끈기를 제고하는 것 즉 지역 시

민사회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과 연결됨. 풀뿌리 마을에서 주민은 상대적으로 쉽게 상호 공유, 공감, 공존의 노력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공간적으로나 확장될 때 다양성 인정, 상생과 협력의 과제를 마주하게 됨. 주민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타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고는 상생과 협력의 자세가 필요함. 추상적 지식이 아닌 구체적인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축적됨.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듣고, 설득하고, 합의하는 소통의 정치를 경험해야 함. 지역 사회 내에 존재하는 장애물-연줄, 텃세, 세대, 젠더 등-을 넘어서야 하며, 이것이 바로 주민과 시민 사이의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임.

- 그러나 주민과 시민 사이를 넘어서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안의 청년을 이대남, 이대녀 혹은 페미니스트인가 아닌가로 집단을 더 갈라 치면서 경계 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음. 당위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구체적인 협력과 존중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아래로부터 실험하고 도전하는 경험들이 축적되어야 하며, 그것은 바로 지역 시민사회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첩경임.
-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풀뿌리 마을에서 안주하려는 지역 주민을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텃세, 연줄, 가족이기주의, 온라인 활동, 지역 무관심-을 주목하고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한 실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일례로 지역 시민사회 스스로 다음의 아래로부터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표를 어느 정도나 갖추고 있는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함. “운동성, 창의성, 친밀성, 개방성, 유연성, 호혜성, 이타성, 전문성, 투명성, 책무성”이 대표적인 지표로 제시할 수 있음.
- 디지털 혁명을 통해 초국적으로 연결된 세계 속에서 우리 사회는 이제 주요한 영역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 모든 이슈-디지털 플랫폼 경제와 깃(gig) 노동,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푸드 플랜과 로컬푸드, 돌봄과 지역공동체, 지방회생과 청년 참여 등-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함.
- 각 영역내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는 과거와 같이 국가 정책을 단순히 대행하는 위탁사업 수행자 혹은 순응적 조력자에서 벗어나야 함.
- 시민사회 단체는 아래로부터 주민을 시민으로 성장시키고자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각 이슈를 학습하고 이해하고, 설득과 대화로 상호 합의를 이끌고, 정책 결정과정 및 구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시키며, 마지막으로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시민이 많아질 때 시민사회의 아래로부터의 거버넌스 모델은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음.
- 지역에서 시민사회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시민사회운동의 5가지 이슈를 주목해야 함. 저절로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민성을 갖춘 시민을 키우는 일이 제일 우선되어야 함. 지역시민사회 생태계 내에 운동성과 독립성이 아직도 생동감 있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함. 다음으로 지역 시민사회 스스로 MZ 세대가 등을 돌리지 않도록 어떤 태도와 준비 그리고 협력의 장을 구축하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함.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는 보조금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함. 물론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한 제도를 갖춘다고 건강한 지역시민사회 생태계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주목하고, 자생적으로 시민사회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선순환적 자원동원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지역 사회 내의 파트너십을 넓혀야 하며, 그 대상은 자원봉사, 국민운동단체 그리고 이익집단까지로 확장하여 이들이 지역 사회 내 공익활동의 공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초대해야 함. 더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을 디딤돌로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 풀뿌리 지구시민을 지역 사회 내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함. 디지털 플랫폼에 묶여

있는 아동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물리적 만남의 장소로 불러내야 함. 이러한 만남 속에서 서로의 얘기를 듣게 되고, 이러한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실험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임.

- 요컨대, 지역 시민사회는 디지털 플랫폼경제로 모든 것이 수렴되고 있는 위험성을 깨달아야 함. 우리 모두 쉽게 연결되지만 동시에 쉽게 떠날 수 있는 환경임. 초국적 유목민의 삶의 한계, 개인의 시대를 바로 시민의 시대로 되돌리는 데는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함.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돌봄의 문제에서 시민의 시대, 지역의 시대, 마을의 시대, 협동과 관계의 시대, 친밀의 시대로 유턴하는 길을 찾아야 함.

IV. 돌봄, 지역공동체 민주주의의 구현 :

‘가벼운 공동체(light community)’의 새로운 실험장

- 돌봄과 관련해서 지역 공동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돌봄과 관련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수준이고, 민간차원에서 돌봄을 해결하는데는 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기대이하 수준이어서 대안을 찾게 됨.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부터 노년의 어르신까지 가장 친숙한 지역 안에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임.
- 그러나 돌봄이 소수에게 맡겨지는 방식으로는 결코 돌봄은 해결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하는 방식으로는 항상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돌봄의 문제는 지역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며, 풀뿌리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하나의 실험장이 됨.
- 장소로서 지역,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 그리고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친밀한 관계성이 전제되어야 함. 이러한 관계성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장소를 의미하며 그 안에서 우연한 만남이 지속적으로 만나며, 그 만남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함 (Manzini 2022).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의 삶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 속으로 강하게 편입시키고 있음. 즉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거주지 집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개인은 물리적 거리를 초월하여 쉽게 연결되고 정보나 상품 혹은 사회서비스를 주문하고 소비함. 그 결과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만 연결되는 디지털 연결망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됨. 손과 발이 움직여 공론장으로 나와 접촉하고 소통하고 토론하고 공동의 문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자유롭게 않은 소비하는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함 (한병철 2022).
-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착각하면서 그러한 소통이 알고리즘에 의해 자신의 삶을 보이지 않게 통제 관리하는 알고리즘 지배(Algocracy) 하에 놓이게 됨을 독해하지 못하고 지냄 (Danaher 2016).
- 민주주의는 들어주고, 소통하고, 설득과 참여를 기다려주는 것인데, 정보는 순간적이고 유행이고,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취사선택하기를 강요함. 돌봄도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한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에너지가 필요함. 그렇기에 돌봄은 관계의 문제이고, 소통의 문제이고, 호혜와 협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 만약 돌봄이 상품으로 인식하고 서비스를 주문하고 소비하고 리뷰 및 평가하는 일방적인 관계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주종관계로 그 관계가 전락됨.

- 이처럼 돌봄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임. 가까운 거리의 일정 장소 안에서 주민들이 우연적인 만남이 반복되면서, 상호 대화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 즉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임. 이처럼 돌봄은 근접의 관계이고, 만남이고, 소통이고 협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알고 서비스를 순환적으로 제공하는 공동체 모습을 띠게 됨.
- 물론 이러한 지역 공동체는 어떤 기획으로 디자인되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며, 지속적인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음. 이처럼 일정 장소 안에서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높여야 함. 그리고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 공동체 내에 다양한 참여자가 연결되고 포함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결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이런 지역공동체 위에서 진행되는 돌봄은 보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이며 포용적이며, 친밀하며, 호혜적인 것으로 접근할 수 있음.
- 그러나 모든 것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음. 스마트폰 하나로 집에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점차 고립되고 있는 것도 잊은 채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급증하고 있음.
- 마찬가지로 직장과의 경계가 애매해지면서 문화와 오락도, 사회적 서비스도 다 집안에서 해결하려고 함. 공공의 장소로 문제를 가지고 와서 협동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기피하게 됨. 결과적으로 삶의 양식 특별히 돌봄도 개인화로 치달게 되며, 이것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더욱 강화시키게 됨.
- 돌봄은 사실 물리적인 접촉과 구체적인 관계성을 통한 신뢰가 없으면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가족 간의 유대관계 혹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아직도 작동하는 경우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돌봄의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것은 지속되기 어려울 정도로 개인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
- 가까운 거리의 돌봄 그리고 친숙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이 가장 이상적임을 모두가 동의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주목하게 됨. 요컨대, 돌봄은 장소, 관계, 그리고 근접성의 요소가 가장 핵심이며 이것을 가장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공동체인 것임.
- 지역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 참여를 통한 구성원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돌봄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기도 함. 기존에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물리적인 접촉을 요구하는 돌봄은 오랜 시간 그리고 고도의 집중적인 관심을 쏟아야 하는 서비스임. 친밀감이 없는 상태에서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임. 가정에서 요양시설에서 다시 가정으로 돌봄 서비스가 순환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음, 지역 공동체는 이러한 상호 접촉을 일상적으로 유지했던 장소이고, 이런 접촉과 만남이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함. 우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들도 우리에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쉽게 형성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함.
- 지역공동체를 통해 돌봄 서비스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는 유일한 대안인 것임. 원거리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언제든지 떠나는 일시적인 관계에 불과함. 우리는 돌봄 없이는 홀로 설 수 없고 살수도 없는 존재임. 유아기, 아동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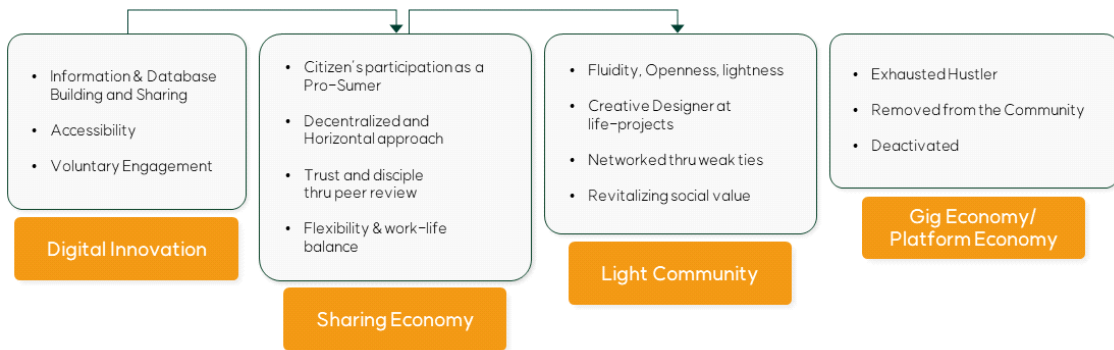
거쳐, 청소년기, 성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평생 돌봄을 받아왔고, 돌봄을 제공하고, 그리고 다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즉, 돌봄 없이 아무도 살 수 없는 존재임.

- 이러한 돌봄 서비스가 지역공동체에 없다면 돌봄은 곧 상품화되고 시장경쟁 방식으로 소비되는 것임. 안타깝게도 과거 돌봄 서비스를 상호 제공하고 교환하는 지역공동체가 소멸되면서 지역 주민은 소비자로 전락되고 있음. 돌봄의 사유화 혹은 상품화는 종국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 불평등을 강화하게 됨.
- 이런 견지에서 돌봄 민주주의는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지역공동체 재구성 과정과 연결되며 이는 협동적 삶을 전제함. 거주공간을 공유하면서 지역 주민은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협동하게 됨. 이러한 협동의 삶이 누적될 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임. 이러한 일정 장소에서의 협동적 삶이 지역으로 확대되면 공유, 공감, 그리고 신뢰의 관계가 강화되고 이는 돌봄 서비스 활동에 가지 참여하게 됨.
- 물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헌신된 조직이나 단체가 이러한 협동의 방식을 추동하고, 함께 디자인하고 상호 부조와 지원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돌봄 서비스는 어느 지역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자동화된 모듈이나 매뉴얼로 제공될 수도 없음.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좀 더 효과적인 방식을 발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돌봄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매뉴얼대로 진행될 수 없는 맞춤형 활동임. 요컨대, 돌봄 민주주의 핵심은 사람들의 만남에서 시작되고 그 만남은 소통과 협동의 과정으로 이어지고 각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새롭게 창출하는 맞춤형 과정임. 최고의 돌봄은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많은 시간과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 서비스이기에 이것이 가능한 곳은 지역 공동체인 것임.
- 요컨대 디지털 혁명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처방과 서비스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일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돌봄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임. 일정 장소 안에서의 사람의 만남으로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친숙한 만남과 지속적인 서비스를 통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성을 구축하는 것임. 이런 견지에서 지역 공동체를 떠난 돌봄 서비스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유임. 향후 지역 공동체가 지역 구성원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시민성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돌봄을 제대로 구현하는 지역공동체는 단순한 지역 주민이 아니라 호혜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을 전제하는 것임.
- 지역공동체 내에 시민성을 갖춘 시민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로 주민과 시민 '사이'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가벼운 공동체(Light Community)' 실험을 주목하고자 함. 지역 주민은 개인으로서 지역의 경계 안에서 활동하지만 그것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열린 차원의 협동과 네트워크의 플랫폼으로서 가벼운 공동체 전략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음.
- 가벼운 공동체 전략은 비록 법과 제도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돌봄이라는 공동이슈를 중심으로 개인이 주민에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론장으로 견인하는 플랫폼으로서 가벼운 공동체를 주목함. 이 공간에서 주민은 상호 소통하고 참여하고 협력의 자세로 창의적인 활동을 전개할 때, 어느 덧 시민성을 갖출 수 있게 됨.

- 가벼운 공동체 전략은 결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거시와 미시를 연결하면서 동시에 국가주도의 위로부터의 기획적인 공동체 구축전략을 넘어서면서 풀뿌리 현장, 즉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함. 일정 범위의 공간(마을) 안에서 주민들이 대안을 발굴하고, 협력하여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지역 주체로 올라서서 하는 것이 핵심임. 물론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장애물을 경계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주민은 협동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음.
- 가벼운 공동체(light community)는 현재 한국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안팎의 위기 속에서 마을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기 보다는 재발견하는 것을 강조함. 물리적 근접한 장소를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 경제를 창의적으로 응용한 하이브리드 사례로서 가벼운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임.
- 만찌니(E. Manzini)는 현대사회의 변화 맥락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공동체를 부활하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flexible), 열려 있고(open), 약한 연결고리(light ties)에 기초한 가벼운 공동체(light community)를 통해 개별화되고, 분리되고, 각자도생의 삶의 방식을 극복하는 가벼운 공동체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함. 우리가 꿈꾸는 지역공동체는 결코 전통적인 형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와 미시가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를 지향하면서 풀뿌리 구성원 스스로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들어가고 적응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쉽게 다른 공동체로 옮겨 갈 수 있는 ‘가벼운’ 공동체를 의미함.
- 가벼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은 일정 장소 즉, 지역(도시 혹은 마을)에서 협동과 호혜의 자원을 재발견하기(Exploring), 주민 간의 협동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강화하기(Collaborating), 주민이 스스로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하고 실천하기(Acting) 그리고 기존 관습적 활동과 경계를 창의적 넘어서기(Transgressing),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혁신적 변화를 추동하기(Transforming)를 지역 구성원이 공동으로 경험하는 것을 강조함 (Manzini 2019). 이 과정 속에서 지역 공동체 구성원은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안을 궁리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견 혹은 발명하게 되고, 이에 기초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게 되고 그 사업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게 됨.
- 이 과정은 투명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참여자 모두가 책임을 지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이기도 함. 부연하면 가벼운 공동체를 통해 공동의 프로젝트 예컨대, 지역 돌봄 공동체 사업을 구현하는 과정은 지역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맛보고, 동시에 시민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공동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임.
- 만약 한국 지역시민사회에서 진행된 지방회생 프로젝트를 가벼운 공동체 모델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수많은 장애물이 노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전통적 장애물로 텃세, 이익집단, 토건주의, 주기적 지방선거로 인한 편 가르기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됨.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추진한 각종 정책 사업은 사업간, 조직간 그리고 사람 간의 칸막이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부서별 혹은 지자체별 성과 경쟁으로 인해 유사한 사업이 중복 투자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함.
- 특별히 지역 시민사회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대표적인 예로 주민 간의 만남과 소통을 왜곡시키는 황색 저널리즘의 기승현상을 들 수 있음.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급격한 수렴현상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와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어두운 면이 증가하고 있음. 이들에 대한 돌봄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지역 공동체 사업결정에도 반영될 수 있는 공동체 민주주의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 플랫폼 노동자가 지역공동체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 로 연결시킬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Ravenelle 2019).
- 가벼운 공동체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코로나 19의 여파로 디지털 공간에 머물러고만 하는 사람이 다수가 존재함. 또한 사안별로 물리적 공간 혹은 디지털 공간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하이브리드적 접근 전략으로 공론장의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임. 이것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한 알고리즘 지배가 도래했기 때문임.
 - AI 도움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존중과 경청은 사라지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좋아요 버튼만 누르면서 자신의 의사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소셜미디어가 소통의 메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음. 타자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자세 위에서 진행되는 대화 소통의 능력은 점차 사라지고 있어 지역 공동체 내의 돌봄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민성을 갖춘 시민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 외적 환경이 위협으로 다가옴.

<그림1> '가벼운 공동체' 구축 모델



출처: 공식기, [N포럼2022 Reimagining Community] 발표자료.

-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 그 동안 지역회생 프로젝트가 경쟁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사업을 추진한 사람은 사라지고, 건물만 남겨진 경우가 많음. 큰 사업비용을 동원하여 추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소외되고 그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고립감은 여전함. 이처럼 지역정부가 추진한 수많은 협치는 실패를 거듭하여 지역의 현실은 불평등, 주민 갈등, 지역 상권 침체, 지방학교 폐교, 지방소멸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 또한 중요한 장애물로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무시와 삼농-농업, 농촌, 농민-정치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정책결정자의 안이한 자세를 들 수 있음. 여전히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을 퍼주는 사업으로서 불필요하다고 오해하는 것이 문제임.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농촌, 농업, 그리고 농민의 헌신적 노력과 희생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고 있음. 일례로 도시로 떠난 자식부터가 농촌과 농업을 지키고 있는 부모를 무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함. 그들은 부모에게 힘든 농사 그만하라고 편지를 쏟아 부으면서 부모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준 고향의 음식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름. 이러한 태도와 가치관이 절체절명을 마주하고 있는 삼농정치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들음.
-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는 삼농정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며 삼농에 대한 무시가 결국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의 위기로 귀결되고 있는 것임.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이

고, 지역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가치관임. 이런 왜곡된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새로운 기회가 바로 지역 공동체의 돌봄 민주주의 구현이며, 돌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장소는 바로 지역임.

V. 합의 및 제언: 개인에서 시민으로 유턴(U-turn)

- 거시와 미시적 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정된 한계를 지역 공동체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한국 사회는 지역공동체가 붕괴하고, 가족 간의 사회안전망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각자도생의 시대, 즉 개인의 시대가 도래함. 저자는 개인의 시대를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공동체를 회복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님.
- 지역 주민의 우연한 만남, 소통,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궁리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협동적인 방식으로 대응한 경험들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재발견하자는 것이 핵심임. 오랫동안 구체적인 장소와 사람 사이에서 계승된 공동체와 협동의 경험을 재발견하고, 더 나아가 현재 상황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큰 도전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디지털 혁명과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초국적으로 연결된 사회를 살아가는 MZ 청년 세대가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혁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새롭게 구현할 수 있는 열린 기회의 장소로서 지역을 주목하고, 지역공동체 회생 프로젝트에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실험 공간으로 가벼운 공동체 모델을 제시한 것임.
- 동시에 앞서 강조한 것처럼 디지털 혁명으로 개인의 시대가 도래하여, 초국적 연결시대를 맞아 정보지배체제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다 자유롭고 투명화된 데이터 사회(datafied society)를 즐긴다는 착각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디지털 감옥으로 편입 및 관리되고 있음. 전통과 가치보다는 과학기술과 합리성을, 생활세계보다는 경제 우선주의를, 공동체보다는 대중소비 사회를, 장소보다는 일반화된 효율성을, 설득과 합의보다는 다수결의 논리를, 그리고 과정보다는 경쟁과 결과를 중시하고 있음. 타인과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기 보다는 국가를 동원하여 통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파편화된 이익 사회로 전환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으며, 오직 시민성을 갖춘 시민만이 새로운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것임. 우리가 지금 마주한 가장 큰 변화와 전환의 과제는 바로 지역공동체와 돌봄 민주주의이며, 그 과제를 가벼운 공동체라는 실험을 통해서 공동으로 해답을 찾기를 제안함. 이것은 다름 아닌 개인을 시민으로 다시 유턴하는 과제이기도 함.
- 그 동안 지역 시민사회도 중앙정부 즉 국가차원의 민주화 및 제도변화에 온 힘을 쏟은 나머지 풀뿌리 차원에서 시민성을 갖춘 시민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과정에 대해 당위적으로 접근한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
- 지역 시민사회 내에서조차 과연 소통의 정치가 민주적이고 수평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성찰하며,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 전략이 수평적이지도 못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을 비판하기 앞에서 관성화된 협치 메커니즘에 대해 익숙해진 것에 대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함. 갭은 미시적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공동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정치’(talking politics)가 중요하다고 강조함(Gamson 1992). 주민 간의 소통이 없으면 주민자치의 소중한 열매-다양성, 포용성, 개방성, 유연성, 창의성, 호혜성, 이타성, 투명성, 책무성-를 결코 맛볼 수 없음을 주목해야 함.

<참고문헌>

- 강수돌. 2020. 「경쟁공화국」, 세창미디어.
- 공석기·임현진, 2020. 「마을에 해답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지역 되찾기」, 진인진.
- 공석기·임현진, 2017. 「주민과 시민사이: 한국시민사회의 사회적경제 활동 토크보기」, 진인진.
- 야마시타 유스케, 2019. 「지방회생: 인구감소와 수도권 초집중 극복의 길」, 변화·이윤정·박현춘 공역, 이상복스.
- 이무열. 2022. 「지역의 발명」, 착한책가게.
- 이일균. 2020. 「지방에 산다는 것」, 피플파워.
- 이정진. 2019. 「초연결사회와 보통사람의 시대」, 여문책.
- 임현진·공석기. 2011. 「글로벌 NGOs: 세계정치의 ‘와일드카드」, 나남.
- 한병철. 2023. 「정보의 지배: 디지털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전대호 역, 김영사.
- Danaher, John. 2016. “The Threat of Algocracy: Reality, Resistance and Accommodation,” *Philosophy & Technology*, Vol. 29: 245-268.
- Gamson, William. 1992 *Talking Politics*,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nzini, Ezio. 2019. *Politics of the Everyday*, New York: Bloomsbury.
- . 2022. *Livable Proximity: Ideas for the City that Cares*, Milano: BUP.
- Ravenelle Alexandra J. 2019. *Hustle and Gig: Struggling and Surviving in the Sharing Economy*. Oakland,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holte, Jan Aart. 2003. *Democratizing the Global Economy: The Role of Civil Society*, Coventry, UK: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 Tronto, C. Joan. 2013. 「돌봄 민주주의」, 김희강·나상원 역, 박영사.